



양계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닭사육수수 사상 최대 기록 양계산업 불황 최소화에 노력

닭고기와 계란가격이 지난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급등하면서 장기간 이어져왔다. 이에 따라 양계농가들이 생산에 중점을 두어 시설을 늘려온 결과 닭 사육수수가 지난 1977년 정부에서 발표하는 공식통계가 시작된 이후 금년 6월 현재 1억4천934만수로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앞으로 양계경기전망을 흐리게 하고 있다. 닭 사육수수는 공식통계가 시작된 1977년 3천 22만수(최근의 20% 수준)에 불과했으나 양계산업의 규모화로 꾸준히 증가하기 시작하면서 1996년 6월 1억257만수로 1억수를 돌파하였고 이후 증감을 거듭하면서 1억수 안팎의 수준을 유지해왔다. 금년 6월 1억4천934만수는 지난 3월에 비해 무려 36.2%가 증가한 수치이며, 지난 2002년 6월 1억2천995만수가 가장 높았던 시세로 기록되고 있다. 지난 조류인플루엔자 이후 3월까지의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 왔으나 그 이후 다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이를 더 이상 방지할 수 없다는 판단아래 양계산물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에 나섰다. 정부에서도 육계 및 계란가격이 호황을 누리면서 육계의 경우 지난 6월 전분기 보다 무려 67%(평균 증가율 42.8%)의 증가율을 보였고, 산란계는 5.9%가 증가하였다고 전제하면서 육계의 경우 육계원종계 쿼터제 실시와 종계의 생산성 저하로 육계병아리가 부족하여 백세미 입식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 한데 기인하였으며, 산란계는 노계도태자연과 환우에 그 원인을 찾았다. 이번 대책회의에서 나온 정책 방향을 보면 종계데이터베이스(DB) 구축을 통한 쿼터제 시행, 가격안정을 위한 병아리 연동제, 사육수수 안정화를 위한 75주령 이후 종계노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의무자조금 사업이 금년 내에 기틀을 잡고 추진이 될 수 있어야 이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자조금사업 활성화 방안도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이에 대해 각 업계에서는 긴급 모임을 갖는 등 합리적인 대안 마련에 바쁜 모습이다. 앞의 대안들을 현실에 부합시키기 위해서는 다방면으로 연구와 협의가 있어야 하지만 정부에서 불황에 대비해 양계업계에 어느 해 못지 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데 업계는 환영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의 지혜로운 대처로 앞으로 예고되는 불황을 슬기롭게 해결하여 양계산업 발전의 견인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양계장내 외국인 고용 어려움 여전 고용특례법 등으로 해결책 마련에 힘써야

양계농가에서의 인력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도시화와 서비스업의 발달로 인해 '90년대부터 3D업종을 기피하면서 양계농가의 인력난이 심화되었고, 인건비 상승도 인력수급에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인력수급을 위해 싼 가격의 외국 노동력을 '외국인 산업연수제도'를 통해 해결을 해왔으나 서비스 업종으로의 외국노동자 이탈이 심화되었고, 이로 인해 불법 체류자들이 농업분야인 양계업에도 종사하게 되었다. 그러나 당시 산업연수생제도는 노동부, 해양수산부, 건설교통부 등에서 실시되어 왔고 농업분야에는 적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양계장에서 종사하는 외국인들이 불법체류자로 분류되어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지난 2003년 농업분야에도 산업연수생제도가 도입되면서 7월 200여명의 외국 노동자들이 농가에 투입된 이후 꾸준히 연수생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같은 해 외국인 '고용허가제'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 제도와 병행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농업분야에서는 산업연수생제도, 고용허가 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양계산업을 포함한 축산업은 타산업과 달리 생명을 가진 가축을 다루는 산업으로 하루라도 관리를 게을리 할 수 없다. 따라서 근무하던 고용자(내국인, 외국인)가 예고도 없이 농장을 그만둘 경우 농장관리에 당장 문제가 되는 만큼 신청부터 근로자를 공급받기까지 최소 2개월이 소요되는 현 제도로는 이를 충족시키기 힘든 부분이 많다. 또한 언어소통이 안되는 외국인 고용자에게 생명을 관리하는 미세한 주의점까지 설명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다. 6월부터 중국 조선족 교포들이 농업연수제를 통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긴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는 것이다.

최근 농가들로부터의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특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다. 외국인 고용특례제도는 조선족으로 비교적 언어소통이 쉽고 친지방문목적 등의 비자로 국내에 이미 입국하여 있는 상태의 조선족 교포를 언제든지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또한 취업이 될 경우 3년 이상 연장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실제로 수많은 조선족 교포들이 농업분야에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서비스업과 300인 이하의 건설업에서만 채택이 가능하여 실제로 적용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고용특례 제도를 농업분야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입법을 요구해 논 상태기 때문에 빠르면 금년 내에 이에 대한 확답이 나올 것으로 보이며, 이 제도가 채택될 경우 양계장 인력수급 문제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된다.

계란 D/C폭 늘리려는 유통업체 계란유통 불합리 탈출방안 마련시급

전례 없는 난가가 형성되어 장기간 채란업이 호황을 맞이하였지만 최근 3개월 사이에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모든 상황이 반전되고 있다. 난가도 25일 현재 107원이지만 실제 농가에서 받는 계란은 70원대로 낮아졌으며 그나마 질이 나쁜 계란은 70원 이하에도 거래가 되면서 농가 생산비인 80원대를 훨씬 밑돌고 있다.

채란업을 하다보면 계란생산이 부족할 때와 과잉될 때가 반드시 나타나며, 이러한 예측은 몇 개월 전에 대한양계협회 통계자료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산관측 등을 통해 발표되고 있다. 금년 하반기부터 계란생산이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미리 발표되었고, 노계도태 및 노계군 환우금지를 홍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또한 수월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관계로 최악의 계란 유통현실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과거에 유례없는 DC폭이 벌어지고 유통이 혼란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대해 많은 생산자들이 유통대란이 일어나지 않을까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제주도의 경우 DC폭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양계를 시작한 이래 처음으로 부산 등 육지로 계란이 가질 못해 장기간의 체화현상을 보인 경우도 나타나고 있으며, 유통의 혼란한 틈을 타고 생산자와 유통상인들간의 DC폭 협상 등으로 최근 들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10만수를 생산하는 한 채란인은 계란의 생산 흐름을 파악해 난가를 낮출 때는 과감히 내려야 하며, 이것을 통해 DC폭도 줄이고 생산조절도 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DC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상인들과 마찰이 잦게 되어 계란유통에 결코 유리하지 않음을 강조하였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계란가격은 동경시장의 35%가 넘는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농협에서 유통흐름을 파악하여 니혼게이지이신문(일본경제신문)을 통해 발표하고 각 지역별로 이에 준하여 적용을 하는데 DC폭은 개당 18원에서 25원 사이에서 결정을 하되 결정된 DC가격은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지켜지면서 유통의 안정화를 가져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여기에서 DC가격은 상인들의 순수한 유통가격이며, 대형농장이나 대형상인들이 솔선수범하여 이 가격을 지켜 유통을 하고 있다.

국내 일부 지역에서는 유통의 불합리를 없애기 위해 발표된 가격을 기준으로 지역 상인들과 협상을 통해 그달의 적정한 DC가격을 결정하여 유통의 폐단을 없애려는 노력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란유통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과거부터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계란유통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조기에 불황을 탈출할 수 있는 지혜를 모아보자. **양계**